

광주시 문화산업 투자협약 부실 투성

고용인원 부풀리기·상장폐지설·엉뚱한 회사번호 신수정 시의회 “실적 몰두보단 면밀한 기업 조사”

광주시가 투자협약을 맺은 일부 문화산업 업체가 ‘부실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북구3) 의원은 15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지난달 14일 시가 투자협약을 맺은 일부 업체가 자본 잠식 등 문제점이 있는 기업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애니메이션·모바일게임 3개, 문화산업 2개 업체와 투자규모 155억원, 일자리 창출 203명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광주 3곳에 조성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할 예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30억원 투자, 30명

고용 협약을 맺은 P사는 최근 3년간 자본총계, 영업·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적자 상태다.

기업 평가 업체 크레탑(CRETOP) 분석 결과 기업등급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단계(CCC)’였다.

기업 평가 업체 나이스(NICE) 분석에서는 산업 활동성과 규모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50억원 투자, 55명 고용을 약속한 S사도 기업등급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단계’였고, 나이스 분석은 아예 없었다.

현재 직원은 3명에 불과했다.

2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G사도 최근 3년간 자본총계, 영업·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였다.

특히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8억원 적자였다.

G사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았고, 성장성은 ‘최하위’, 활동성·규모는 ‘하위’ 평가를 받았다.

주식 가치는 2016년 4만원에서 현재 590원으로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손실을 메꾸기 위해 상반기에는 토지와 건물까지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G사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개발한 게임들이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광주시의 1호 투자협약이 부실기업과 맺은 부실 협약으로 확인됐다”며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눈앞의 실적에만 몰두하지 않고 면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자본이나 인력 등

에서 매우 영세한 규모로 시작해 1개의 프로젝트만 성공해도 우량기업으로 급성장한다”며 “이번 협약은 시 자본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MOU(투자양해각서)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문화산업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시는 “P사는 2016~2017년 게임 제작 기간이어서 매출이 없었고 현재 네이비 웹툰 유명작가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게임을 제작 중이며, 반응이 좋아 올해 7월 10억원 계약, 11월 30억원 투자, 내년 3월 투자 계약 예정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고 설명했다.

S사에 대해서는 체험관 운영 인력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고 최근 일정 신용도(B+)의 기술보증서를 받았으며, G사는 올해 8월 투자를 받았고 외부 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 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치 브리핑

황주홍, 농민수당 확산·입법 추진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민수당의 도입과 법제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김중희 의원, 민중당 김중훈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상임연구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등 3인이 발표자로 참여 했다. 또 전국농민회총



연맹회의 고창군 농민회 이대중 회장, 광주전남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충북도연맹 김남은 정책위원장 등 3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 하는 현실에서 농민수당이 농민의 기본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내년 해남군이 자치단체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로 농민수당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지방문화원 231곳중 3곳만 자체 인건비”

지역문화와 향토문화의 보존과 활성을 위해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절반 수준이 사업을 추진할 역동성을 잃어 사실상 고사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읍)의원은 15일 한국문화원연합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231곳 지방문화원 중에 3년 이상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없는 지방문화원이 전국의 절반수준인 119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3년 이상의 중장기 연구계획이 없는 지방문화원 역시 1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문화원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은 서울 노원문화원 등 3곳에 불과하다.

현재 231개 지방문화원중 74%가 자



자체로 부터 70%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33%의 지방문화원은 인건비 100%를 지원 받는다.

특히 전남의 경우 22개 지방문화원 중 영광, 화순 등 12곳이 인건비 100%를 지원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점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의 직접 지원도 거의 없다”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문화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철도 착공식에 각종 회담 줄줄이...평양선언 이행 박차

본격 경험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협력기반 강화

남북이 15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은 물론 분야별 후속 회담 일정에 줄줄이 합의함에 따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각각의 후속 일정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 하나씩 실현되면 4·27판문점선언으로 토대를 복원한 남북관계가 본격적 경제협력의 목전까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번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하기로 한 대목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고위급회담을 위해 판문점으로 떠나기에 앞서 “착공식 일정까지는 오늘(정하기엔) 좀 이른 것 같다”고 말했지만, 공동보도문에 착공식의 대략적 일정이 포함됐다.

‘연내 착공식’은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다. 철도와 도로 현대화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북측이 남측에 착공식 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착공식에 앞서 철도·도로 복구 구간 현지공동조사도 이날 하순부터 시작하기로 남북 간 합의가 이뤄졌다. 착공식 일정을 고려하면 한 달 여 정도에 현지

공동조사가 마무리돼야 해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남북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상시 운영,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협의할 적십자회담도 다음달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회성 단체상봉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접근할 방안이 적십자회담에서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달 말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릴 체육회담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이 논의된다. 2020년 하계올림픽 등의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도 함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조성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도 남북이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데 합의가 이뤄진 부분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공동연구는 향후 공동특구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분석되며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남북 대표단이 15일 판문점 남북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 남색으로 바뀐다...정부 새 디자인 공개

국민의견 수렴 올해 말 최종 결정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경과제의 하나로 추진돼 2020년 하반기부터 발급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을 15일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디자인은 2007년 외교부와 문체부가 공동 주관한 공모전 당선작(서울대 김수정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됐다.

시안에 따르면 차세대 여권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기존 녹색에서 남색 계열로 바뀐다.

이는 1988년부터 사용해온 ‘녹색’ 옷을 32년 만에 벗는 것이다. 1994년 기계판독여권, 2005년 사진전사식 기계판독여권, 2008년 전자여권 등 형태

와 양식이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표지는 녹색이 유지돼왔다.

다만 관용여권(진회색), 외교관여권(적색) 등으로 종류별로는 색상을 차별화할지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표지 디자인은 ‘대한민국 여권’과 ‘REPUBLIC OF KOREA PASSPORT’ 문구, 정부 문양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여권번호 체계도 다양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간에 알파벳이 삽입되는 식으로 일부 변경되고,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삭제된다.

정부는 향후 새 여권 디자인 시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15일 공개한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A(왼쪽)·B 시안.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두 가지 디자인 안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을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온라인·조사기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청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중대 재난 때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 기능이 강화된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도 새로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재난발생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6월30일 기준 10개 자연재난과 27개 사회재난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16일 재난관리 책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연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조속 추진”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에 윤호중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이 국토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5일 당 최고위원회를 열어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의장 이해찬) 산하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하고, 추진단장으로 윤호중 사무총장(3선·경기도 구리시)을 선임했다.

추진단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일괄이양법 외에 다양한 법안, 정책 개발 등을 통한 당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온 국민, 온 지역이 지지하는 균형발전 방향의 기틀을 잡을 계획이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빠른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추진단은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지역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된 내내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뒀다. 분과위원회는 그간 각종 규제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접경지역에 새로운 평화 성장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으로 윤호중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서울=강병운 기자

유시민 “임명공직 안맡고 출마도 안해”

노무현재단이사장 취임 정치재개 가능성에 선긋기

노무현 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했다.

유 신임 이사장은 이날 마포 노무현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장이·취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 대한민국 지도자로 국민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고 평소 가진 생각을 다시 밝힌 뒤 “임명직 공직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2013년 정치를 그만두었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고 어떤 상황이 요구할 때에도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합뉴스